

한중 관계 진전을 넘어 ‘한반도 질서 관리’로

백 범 흠

서울대학교 아연(亞硏)초빙연구원(정치학박사, 前중국사회과학원 객좌교수)

[기획자 註]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026년 8월 19일-20일 간 한국을 방문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고위관계자들과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5년만에 이루어진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정세에 미칠 함의를 살펴본다. [기획: 박동준 부연구원(djpark@jpi.or.kr)]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주요 결과

왕이 중국 중앙외무사무국 주임 겸 외교부장(이하 외교부장)은 5년 만인 지난 8월 19일-20일 간 방한하여 이재명 대통령 예방, 조현 외교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한중 전략대화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현재 한반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과 종전 논의’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셋째, 북러 밀착으로 인해 북중 관계가 이전보다 다소 소원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접근 움직임이 더해진 관계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 관련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 관계 변화와 북-미 대화로 인해 한반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당사자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새 전략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저지하는 ‘한반도 질서 관리 전략’을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한반도 질서의 급격한 재편을 방지하고, 자국의 영향력과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려는 ‘질서 관리형’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뜻한다.

(1) 한국의 대외 관계: 대미 및 대일 관계, 대만 문제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측 인사들에게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느 한쪽에 편승하기보다 ‘독립·자주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2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전략대화에서는 일본의 우익 세력과 역사문제도 거론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겨냥한 NATO식 동북아 군사협력 메커니즘에 동참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 현재까지 공개된 한중 양측 발표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대만 문제와 관련 한국측에 구체적 요구를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대만 유사’ 문제

등과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의 대중국 견제 성격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한국측 인사들은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한일 안보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 회동에서 한중 두 나라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미일 안보협력, 북한핵 등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깊은 전략적 인식 차이를 다시 확인했다.

(2) 북한 핵·미사일과 '두 국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문제

한국측 인사들은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대체로 호응하면서도 '북-미 대화는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장기간 유지해 온 '대북한 적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을 '두 국가'로 여러 차례 지칭했다.

조현 장관은 한중 관계 진전 성과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위성락 실장도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와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측은 북-미 대화 자체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북-미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측 인사들은 남북 평화공존이 중요하고 이를 추진하기는 하지만, 남북이 영구적으로 별도의 정치체제, 즉 2개 국가를 지향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3) 경제협력 증진과 고위 인사 교류 확대 문제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고, 두 나라가 이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중 FTA 후속 협상 등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11월 중국 선전 2026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적극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 측 역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경제협력 증진, 공급망 협력 확대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조현 장관은 한중 관계 발전의 성과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왕이 외교부장 방한을 통해 한중 두 나라의 정상-외교장관-안보실장으로 이어지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중 두 나라는 경제협력 증진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진전 문제와 관련 지속 협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2. 왕이 외교부장 방한의 주목적

(1) 한국의 대외 관계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 지도자들이 보는 한국은 '문 앞의 바다'를 나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동시에 1894년 이전 청나라 중심 동아시아 체제에서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했던 인근국이자 자국의 최

대의 라이벌 미국의 군사기지를 다수 받아들인 '눈앞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국의 국가안보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만약에라도 중국이 한국을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시키려 할 경우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될 한국을 한미동맹과 일본 쪽으로 등 떠미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현실적 목표는 한국의 친중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여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이 중국을 직접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측 인사들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왕이 외교부장이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정부이며, 한국과 중국이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여 친중 국가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중국에게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국은 안보·지정학적 완충인 북한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 경제·기술·지역전략 측면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국을 북한 이상의 파트너로는 대우할 수는 없다. 중국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한미동맹의 해체보다는, 한미동맹 등이 대중국 군사 메커니즘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긴밀히 연계된 한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한미일 군사협력(내지 동맹)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자간 연대에 더 깊이 참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한반도 문제

한중 관계와 관련,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것이고, 한국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발휘다. 그런데,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계기 다시 확인된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중이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조현 장관은 8월 19일 왕이 외교부장에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 역시 8월 20일 왕이 외교부장에게 '단계적·실용적 북한 비핵화' 접근법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다만 한반도의 평화·안정·발전과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한국은 북한 비핵화 → 한반도 긴장 완화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순으로 고려하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 → 한반도 평화·안정 → 남북 2국가 공존 → 장기적 관리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중국이 북핵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했다고 볼 근거도 일체(一切) 없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순위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평화·안정 순위가 높아졌다는 신호로는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면 북중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 북핵을 인정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을 추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북 압박보다는 한반도 상황 관리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자'라기보다는 한반도 위기의 '관리자'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북-미 대화 중재'와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북-미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장기간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일정 부분 제한적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자체는 약하지 않지만,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하고 북러 밀착 등으로 인해 그 영향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하는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미 대화 자체를 직접 중재하기보다는 이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규정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는 지속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投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그 이후 형성될 한반도 질서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이번 왕이 외교부장 방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중재자가 되기보다는, 한반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되지 않을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경제협력 증진과 고위 인사 교류 확대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경제협력 증진과 공급망 강화, 고위급 교류 확대를 강조한 것은 필요하고 또한 적절했다. 경제와 과학기술, 군사, 문화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인근국 한국을 실질적 이해관계로 붙들어 놓는 것이 외교·안보적으로 중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한중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유지·확대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고리도 될 수 있다. 한국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묶어두는 것은 특히 유사시 중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3. 한중 간 인식과 이해의 간극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

(1) 독립자주외교 언급

왕이 외교부장은 조현 장관과 위성락 실장 등에게 "한국은 독립자주외교를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중국이 한국에 '독립자주외교'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조선이 1894년-1895년 청일전쟁과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독립자주'를 요구하는 거친 방식은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중국의 대한국 영향력 확대 시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의 반중 감정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다.¹⁾

1894-1895년 청일전쟁 후 미국의 주선으로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가 청일전쟁의 교전 당사국이 아니었던 조선의 지위를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으로 규정한 것은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지우고 일본

1) 왕이 외교부장은 2022년 8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독립자주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7월 조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도 한중 관계에서 "(한국의) 독립자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한반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 동아시아 질서 개편의 출발점이 됐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05년 보호국화, 1910년 강제 병합으로 나아갔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측에 '독립자주외교'를 요구한 것은 중국의 내심과 관계없이 향후 한중 관계에 계속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두 국가” 표현 문제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가 남북을 반복하여 ‘두 국가’라고 호칭했다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8월 19일 조현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두 국가가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고, 다음날 위성락 실장과의 전략대화에서도 다시 한국과 북한을 ‘두 국가’로 표현했다. 중국이 이전에 주로 사용하던 ‘남북 쌍방’이나 ‘관련 당사자’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호칭의 변화다. 물론, 왕이 외교부장의 ‘두 국가’ 발언을 갖고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중국은 이전에도 남·북한 모두를 국가로 지칭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두 국가’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느냐가 더 중요하다. 왕이 외교부장은 ‘두 국가’를 말하는 동시에 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의 장기 안정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이상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해서는 안 된다. ③ 미국과 북한이 직접 충돌해서는 안 된다. ④ 한미동맹은 인정하지만, 한국이 대중 군사 블록에 편입돼서는 안 된다. 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두 나라’의 장기적 평화공존이 필요하다. 왕이 외교부장이 ‘남북 쌍방’이 아니라, 남북을 각각 국가로 호칭하면서 평화공존과 장기적 안정을 강조했다.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질서 인식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이 ‘두 국가’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 분단론을 지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안정된 남북 관계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평화공존과 영구 분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한국에게 있어 평화공존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적대를 끝내기 위한 중간의 과도기 단계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남북 평화공존이 통일보다 더 바람직한 한반도의 최종 상태로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의 대만정책과 한반도 정책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 분리 반대 → 통일을 주장한다. 하지만, 한반도에 대해서는 두 국가 → 평화공존 → 장기적 안정을 말한다.

중국은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보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제5항이 규정한 중국의 ‘한민족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조기 통일 지지’ 입장이 향후 어떻게 연결, 진전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는 ‘하나의 중국’과 ‘영토 보전’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는 남·북한의 장기적 평화공존을 주장할 경우, 한국과 미국 등에서 양안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상이한 원칙 적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기 공동성명은 제3항에서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을, 제5항에서 ‘한민족에 의한 한반도 조기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게 ‘한민족에 의한 한반도 조기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한 협상의 결과로, 한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

장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두고두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과 양안 통일'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외교관계의 기초인 상기 성명과 배치되게 '(한반도) 두 국가'를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의 정치·외교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4. 결론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한중 관계 진전이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두 나라는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복원했으며,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중 FTA 후속 협상 등 경제협력 증진과 공급망 강화에도 합의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또한 한중 관계의 진전을 넘어, 중국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가능성이라는 한반도 질서 변화에 대응, 남북 평화공존을 지지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서도 중국의 영향력과 당사자 지위를 유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한중 두 나라는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을 통해서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인식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한국인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이 중국에 바라는 것은 북한의 대화 복귀 → 긴장 완화 → 비핵화 → 평화 체제의 길로 나가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 반면, 중국이 원하는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긴장 관리 → 평화공존 → 북미 충돌 방지 → 중국의 한반도 문제 당사자 지위 유지 → 대미·대중 관계 등에서 한국의 (중국의 이익을 고려한) 독립적 판단과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익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만, 협력의 목표와 한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추동하고자 하는 '(한반도) 두 국가 평화공존'이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로 진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이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원칙과 어긋나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안 통일, 즉 영토 보전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규정한 반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두 국가의 장기적 공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속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 평화공존은 바람직하지만, 평화공존이 분단의 영구화를 동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원칙의 한계 내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핵심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의 핵심 국가이익 가운데 하나다. 중국이 '한반도 2국가, 장기 공존'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할 경우, 한국 역시 대만 문제 관련 시각과 정책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동아시아 군사안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대미, 대일 관계와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필요로 한다. 한국 역시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을 필요로 한다. 서로 필요로 한다는 것과 서로의 전략적 목표가 같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결정적 계기였다.

**저자 소개**

: 백범흠(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정치학박사, 前 중국사회과학원 객좌교수)

백범흠은 외무고시를 거쳐 1993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0여 년 간 외교부 북핵기획단 서기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주제네바대표부 정무과장, 외교부 경제정책총괄과장, 주중국대사관 총영사, 주다렌 영사사무소장,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중국사회과학원과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고,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초빙교수)과 우석대(특임교수), 서울대(초빙연구원)에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NSC)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외교안보 관련 국가기관들에도 출강하고 있다. 백범흠은 외교부 입부 직전인 1993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했으며, 1998년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법학 석사,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범흠은 중국사, 일본사, 유라시아사를 포함한 각 지역 역사와 정치, 지정학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2026년 9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